

정책연구 2009-02

#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허찬국 · 안순권 · 김창배

##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1판1쇄 인쇄/2009년 1월 5일  
1판1쇄 발행/2009년 1월 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김종석  
편집인 · 김종석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3771-0057

---

ISBN 978-89-8031-523-9

값 5,000원

# 목 차

---

<요 약> .....	7
I. 서 론 .....	19
II.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장 .....	21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21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	24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24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26
III.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및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	31
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	31
2.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	33
IV.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 .....	36
1.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원활화 .....	36
2.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실행 .....	41
3. 적극적 실물경제 회복대책 .....	44
4.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	51
5.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53
6.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	55
참고문헌 .....	58

## 표 목차

---

<표 1> 세계경제 전망 .....	25
<표 2>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	26
<표 3> 주요 장단기 시장금리 동향 .....	28
<표 4> 최근 실물지표 추이 .....	29
<표 5> FRB와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	31
<표 6>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적 대응의 유형별 현황 .....	32
<표 7> 국내은행의 BIS 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추이 .....	37
<표 8>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실적 및 추진계획 .....	39
<표 9>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 .....	45
<표 10>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47
<표 11> 2009년 예산안 주요 내용 .....	49
<표 12> 국내은행 중기대출 증가현황 .....	56
<표 13> 패스트트랙 유동성 지원 실적 .....	56

## 그림 목차

---

<그림 1> 미국 정책금리와 주택가격 증가율 추이 .....	21
<그림 2> CDS 시장규모 .....	22
<그림 3> 미국 경상적자와 순국제투자 추이 .....	23
<그림 4> 주요국 통화가치 및 주가 변동 .....	24
<그림 5> 원/달러 환율 및 주요국 환율 변동폭 .....	27
<그림 6> 시장금리 추이 .....	28
<그림 7> 수출 동향 .....	30
<그림 8> 경기종합지수 추이 .....	30
<그림 9> 기업구조조정체계 .....	43



## <요 약>

### I. 서론

-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재정지출확대 중심의 실물경기대책 등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면서 금융시장 불안해소 및 실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본 연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되어 전 세계경제에 유례가 드문 위기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장을 분석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내용을 살펴본 후 한국경제의 위기극복방안을 제시함.

### II.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장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등에 따른 실물 및 금융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저금리정책이 부동산 버블 형성에 기여
- 금융기법의 발달 등으로 2000년대 들어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 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시장 급격 확대
- 통합감독 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CSE) 등 지나친 금융규제완화 및 미흡한 감독체계
- 제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따른 달러화 하락과 인플레이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불가피하게 이자율 인상

##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 □ 세계경제

- 대부분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달러) 선호의 확산으로 단기간에 급락하고 주가지수는 큰 폭 하락
- 질물경기 침체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공업국으로 확산
  - 미국, 일본,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들 2008년 3/4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
  - 중국 경제성장률 한자릿수로 둔화: 10.1%(2008년 2/4분기) → 9.0% (2008년 3/4분기)
- 주요 전망기관들,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대거 하향조정
  -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 IMF(3.0% → 2.2%), 세계은행(3.0% → 0.9%)
-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국제유가 큰 폭 하락
  - 이에 따라 각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빠르게 둔화

### □ 한국경제

- 주가 급락, 원달러 환율 급등, 시장금리 상승
  -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증시 급락
  -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로 전환되면서 환율급등에 기여
  -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안전자산인 국고채금리는 하락. 하지만 CD, CP, 회사채수익률 등 크레디트물의 상승세는 지속
- 질물경제 급격한 하강국면에 진입
  - 소비: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재판매 2008년 9월, 10월 연속 감소세
  - 투자: 설비투자 추계 2008년 10월 중 큰 폭으로 하락 반전(-7.7%)
  - 생산: 광공업생산 증가율 2008년 10월 중 하락세로 반전(-2.4%)
  - 고용: 취업자 증가 2008년 10월, 11월 중 10만명 미만에 그침
  - 수출: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2008년 10~11월 중 감소세로 전환 (-5.1%)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표들 하락세 지속



### III. 국제공조 및 주요국 경기부양정책

#### 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주요국 중앙은행 전격 금리인하 공조

-미 FRB: 2.00% → 1.50%(10/8) → 1.00%(11/6) → 0~0.25%(2008/12/16)

-유럽 ECB: 4.25% → 3.75%(10/8) → 3.25%(11/6) → 2.5%(12/4) 등

통화스와프 확대 및 신규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FRB는 ECB, 일본, 영국,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한국,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와는 300억 달러 신규 스와프 체결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2008/12/12)

G20 회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을 강화

-대수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확대, 자유시장원리 추구 및 보호주의 지양, 향후 1년간 무역 및 투자 장벽 설치금지 등 합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은행 간 채무보증, 예금지급보증, 은행 자본확충 등

#### 2.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미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책 시행

-소득세 환급 등 총 1,680억 달러 규모의 세제지원 실시(2008년 2월)

-오바마 차기 정부, 7,000억~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예상

-FRB, 소비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에 2,000억 달러 투입(2008/11/25)

#### □ 일본

- ㄹ금용안정대책 발표(2008/10/27)
- ㄹ경기종합대책(2008/8월, 10월)에 이어 12월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발표
  - 3차 대책(2008/12/12): 총 23조 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

#### □ 유럽

- ㄹEU 집행위원회는 향후 2년간 재정지출과 감세 등에 의한 총액 2,000억 유로(약 2,5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2008/11/26)
- ㄹ영국: 영국정부는 예산안 초안발표(PBR)를 통해 향후 2년간 256억 파운드(388억 달러)경기부양책을 발표(2008/11/24)
- ㄹ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260억 유로(329억 달러) 규모의 자국 자동차산업 구제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책 발표(2008/12/4)
- ㄹ이탈리아: 총 8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2008/11/28)
- ㄹ호주: 총 47억 호주 달러(31억 US달러)를 도로, 철도, 교육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부양책 발표

#### □ 중국

- ㄹ중시부양대책(2008/9/19)
- ㄹ총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정책(2008/11/9)과 2,059억 위안의 사회 인프라 투자 등 후속 경기부양책 발표(2008/11/13)
- ㄹ부동산활성화 대책(2008/10/22), 2008년 11월부터 시행

### IV.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

- ㄹ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은 주요국의 대응조치와 거의 비슷한 대책을 실행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정책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한 후 보완 및 추가 대책을 찾아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1.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원활화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 회복 기미의 불씨를 살려 안정 기조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신용경색 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음.
  - 돈맥경화(錢脈硬化) 해소에 기존의 유동성 직접방식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부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적극 실행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신용창출기능 제고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 조성에 의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도 차질이 없게 해야 함.
  - 신용경색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함.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수지 관리 강화 및 외환보유액 확대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경기의 급랭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회복이 시급함.
  - 외환보유고 확대를 추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 회복 및 통화스와프 협정 국가인 미국·중국·일본에 대한 경제외교적 입지 강화
- 위기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기능 정비, 재정부·금융위원회·한은 간의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 필요

## 2.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실행

- 2009년 1월 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로 기업구조조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글로벌 경기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어 대부분의 업종

이 타격을 입기 전에 정부가 구조조정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기업 부실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대주단(채권단) 협약,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유도하며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던 정부의 입장이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 구조조정 유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업종별 공급과잉 해소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계적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반도체·철강·화학·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체 경영합리화를 유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회복기에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
- 건설업의 경우 부실회사의 정리와 함께 부동산 거품기의 주택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부동산규제 및 세제 완화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에 의한 주택수요 회복을 유도, 주택시장의 수급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큰 틀의 구조조정으로 우량 및 회생가능 기업이 가려질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회사채 및 CP 시장의 신용경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소수의 개별 기업을 정리하는 피상적인 구조조정에 그치면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경색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본격화될 가계,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방안과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11월에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및 신규 지원방안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조정은 자사의 채권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관례적인 원칙이나 세부 실행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의 신규 자금지원 분담을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권의 대립이 실례임.

- 2003년 카드대란 발생 이후 부실화된 LG카드의 처리와 관련한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원칙과 처리비용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실기 등을 교훈 삼아 부실 금융회사 및 기업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마련도 시급함.

- 채권은행들이 건설 및 조선 회사 등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별로 서로 다른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함.

### 3. 적극적 실물경제 희생대책

-가능한 모든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여 경기침체 국면을 최소화해야 함.

- 2009년 예산안의 조기집행으로 경기침체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노력이 필요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필요

- 이 경우 추가적 감세 및 재정확대,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적인 내수침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 GDP 대비 경기대책 비율을 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노력도 필요함.

- 필요할 경우 내년에 추경예산을 편성, GDP 대비 경기대책 비율을 5% 수준으로 높이더라도 중소기업 및 민생지원 등 취약부문 및 계층보호에 집중
- 이번 위기는 재정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 규제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 민간의 활력을 되살려 기업의 투자, 신기술개발 등을 유도해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의 기본원칙을 유지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출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추가 재정지출확대는 교육, R&D, 재생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고 SOC 투자는 환경·문화·관광 서비스 부문과 연계하여 공공건설 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함.

#### 4.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 ˆ질물경제 침체의 여파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 개선이 시급함.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함.
- 임금상승 억제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경기침체 영향을 분담해야 함.
-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하여 고용사정 악화의 폐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함.

#### 5.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ˆ투자확대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하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시행
- ˆ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실행
  - OECD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7개 부문(창업, 허가취득, 노동, 재산등록, 납세, 무역, 계약이행 등)의 규제개혁을 조속히 시행
- ˆ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임금인상 억제 및 SOC 투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 6.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 진용경색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되나 보완이 필요함.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회생가능한 기업에 자금이 집중 공급되도록 옥석 가리기를 위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실행해야 함.
  - 신용보증제도의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묻지마식 퍼주기 대출에 따른 부실급증의 소지를 차단해야 함.
-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등 재정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 I. 서론
- II.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장
- III.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및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 IV.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



# I. 서론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됨.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 금융·실물 부문에서 동시에 충격요인으로 작용

- 신용경색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 미국과의 통화교환협정 체결 이후 외환 및 주식 시장의 과민반응현상은 사라졌으나 외화시장의 외화조달 사정은 여전히 불안함.
- 글로벌 금융불안의 실물경제로의 전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 전망 먹구름

- 세계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금리인하 국제공조 및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으나 급속한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한계를 드러냄.

- 미국·유로존·일본 등 선진 경제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이 세계경기침체의 완충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임.

-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재정지출확대 중심의 실물경기대책 등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금융시장 불안해소 및 실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2008. 10. 19),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2008. 11. 3), 지역경제활성화 대책(2008. 12. 15), 2009년 경제운용방향(2008. 12. 16) 등 각종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대

폭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을 실행

- 본 연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되어 전 세계경제에 유례가 드문 위기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장을 분석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내용을 살펴본 후 한국경제의 위기극복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의미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이 특히 이번 위기에 취약한 요인을 분석
-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책과 비교하여 정부와 한은의 주요 대책들의 적절성 및 합리성을 평가한 후 보완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대안 마련에 기여함.

## II.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장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 저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버블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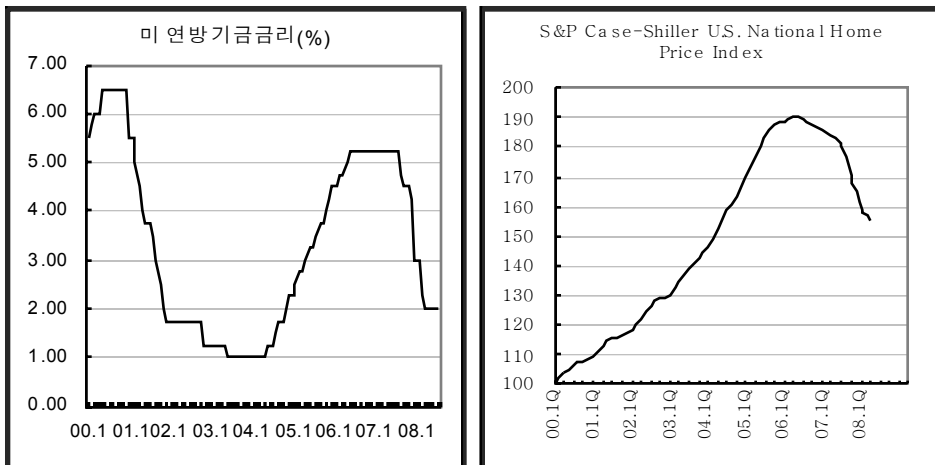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등에 따른 실물 및 금융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미국은 감세정책과 함께 저금리정책 시행

○ 연방기금금리: 2000. 12월 6.5% → 2003. 1월~2004. 5월 1.0%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급증하고 이것이 주택가격의 버블을 형성

○ 미 주택가격: 2000. 1 Q100.0 → 2006. 2 Q189.9(최고점) → 2008. 2 Q 155.3

<그림 1> 미국 정책금리와 주택가격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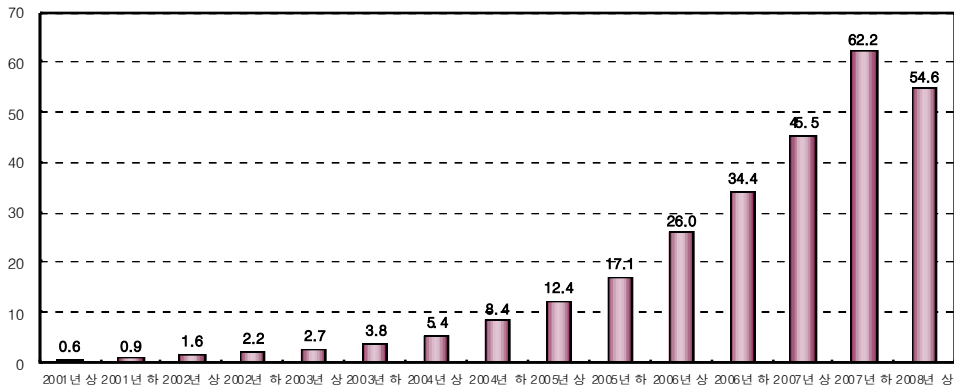


□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 금융기법의 발달 등으로 2000년대 들어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 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시장 급격 확대
  - CDS 시장규모는 2000년 9,000억 달러에서 2007년 45조5,000억 달러로 팽창
  -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세계 총GDP의 10%가 넘는 약 681조 달러

<그림 2> CDS 시장규모

(단위: 조 달러)



자료: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www.isda.org](http://www.isda.org)).

□ 금융규제완화와 미흡한 감독체계

- 2004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마련한 통합감독 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CSE)은 대표적 금융규제완화
  - 총부채가 순자본의 15배 이내여야 한다는 레버리지 규제를 철폐한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순자본의 20~30배까지 자금을 차입
-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체계는 미흡하여 자산유동화의 위험성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자산유동화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위험을 분산하므로 금융당국의 감독강화 유인을 약화시킴.
- CDS는 대출 대폴트에 대한 일종의 보험성 계약인데도 일반적 보험과는 달리 준비금 요구조건이나 한도에 규제를 하지 않음.

□ ‘세계적 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불가피한 금리인상

->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4년 이후 미연준(FRB)의 금리인상에서 촉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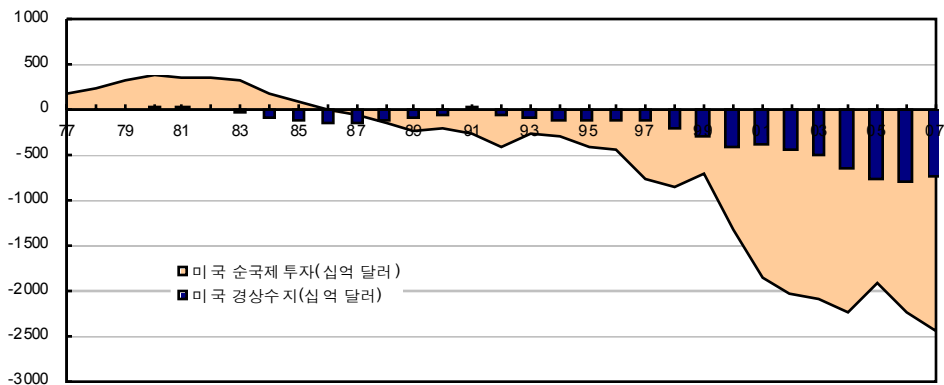
- 금리인상 → 주택가격 급락 →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파생상품 손실 확산 → 관련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 발생

-> FRB,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따른 달러화 하락과 인플레이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불가피하게 이자율을 인상

- 1990년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이 적자는 동아시아와 산유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메워지는 이른바 ‘세계적 불균형’을 초래

<그림 3> 미국 경상적자와 순국제투자 추이

(단위: 조 달러)



##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전 세계의 환율 및 주가 급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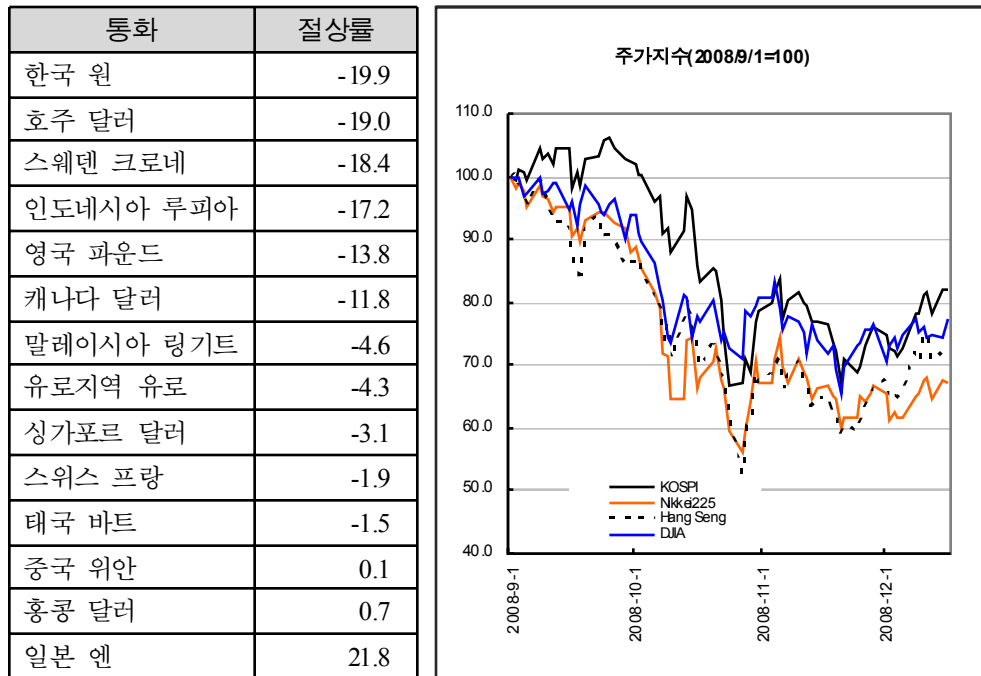
- 대부분 국가의 통화가치가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달러) 선호 확산으로 단기간에 급락

- 통화가치 변동(2008. 9. 1~12. 16): 한국 원 -19.9%, 호주 달러 -19.0%, 스웨덴 크로네 -18.4%, 인도네시아 루피아 -17.2% 등

- 각국의 주가지수도 단기간 큰 폭 하락

- 주가하락률(2008. 9. 1~12. 16): 한국 KOSPI -17.9%, 일본 Nikkei225 -33.2%, 홍콩 Hang Seng -27.6%, 미국 DJIA -22.7% 등

<그림 4> 주요국 통화가치 및 주가 변동(2008. 9. 1~12. 16)





□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

- 실물경기 침체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공업국으로 확산

- 일본(2008년 2/4분기 -1.0%, 3/4분기 -0.5%), 유로지역(2/4분기 -0.2%, 3/4분기 -0.2%)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미국 성장률, 2008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연율 -0.5%
- 중국 성장률 한자릿수로 둔화, 10.1%(2008년 2/4분기) → 9.0%(3/4분기)

- 이를 반영해 주요 전망기관들,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대거 하향조정하고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전망

-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 IMF(3.0% → 2.2%), 세계은행(3.0% → 0.9%)
- 미국 성장률: IMF(0.1% → -0.7%), OECD(1.1% → -0.9%), 세계은행(1.9% → -0.5%)

<표 1> 세계경제 전망

구 분	2008년	2009년					
	IMF	IMF		OECD		World Bank	
전망시점	2008.10	2008.10	2008.11	2008.6	2008.11	2008.6	2008.12
세계	3.7	3.0	2.2	1.7*	-0.4*	3.0	0.9
미국	1.4	0.1	-0.7	1.1	-0.9	1.9	-0.5
중국	9.7	9.3	8.5	9.5	8.0	9.2	7.5
일본	0.5	0.5	-0.2	1.5	-0.1	1.6	-0.1
유로지역	1.2	0.2	-0.5	1.4	-0.6	1.5	-0.6

주: \*는 OECD 회원국.

□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크게 약화

- 국제유가 하락,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상반기까지 세계경제의 주요 위협요인이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하락

- 국제유가(WTI): 145.3달러(7/3, 최고점) → 43.6달러(12/16)
- 원자재가격지수(CRB): 473.5(7/2, 최고점) → 226.31(12/16)

- 각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빠르게 둔화

- 미국: 5.6%(2008년 7월) → 5.4%(8월) → 4.9%(9월) → 3.7%(10월)

- 유로 지역: 4.0%(2008년 7월) → 3.8%(8월) → 3.6%(9월) → 3.2%(10월) → 2.1%(11월)
- 중국: 6.3%(2008년 7월) → 4.9%(8월) → 4.6%(9월) → 4.0%(10월) → 2.4%(11월)

##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주가,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급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증시 급락

- KOSPI: 1,439.67(2008년 10월 1일) → 1,181.50(11월 5일) → 1,006.54(12월 4일)
- KOSDAQ: 440.95(2008년 10월 1일) → 340.85(11월 5일) → 298.92(12월 4일)

- 2008년 들어 외국인 순매도는 약 340억 달러로 2007년보다 확대되었으며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보다 큰 폭임.

<표 2>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1~11월	2008년 8월	2008년 9월	2008년 10월	2008년 11월
한국	-29,417	-34,012	-2,847	-2,371	-3,533	-1,221
대만	2,594	-15,609	-1,009	-2,839	-3,509	-1,818
인도	17,236	-13,576	-300	-2,052	-3,805	-644
태국	1,570	-4,446	-336	-802	-381	-273
필리핀	1,253	-795	-112	-148	-202	59
인도네시아	3,581	1,173	50	9	240	521

자료: 국제금융센터(2008. 12. 1).

□ 원/달러 환율, 외화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급등

- 경상수지가 2008년 들어 적자 추세로 전환되는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되면서 환율이 급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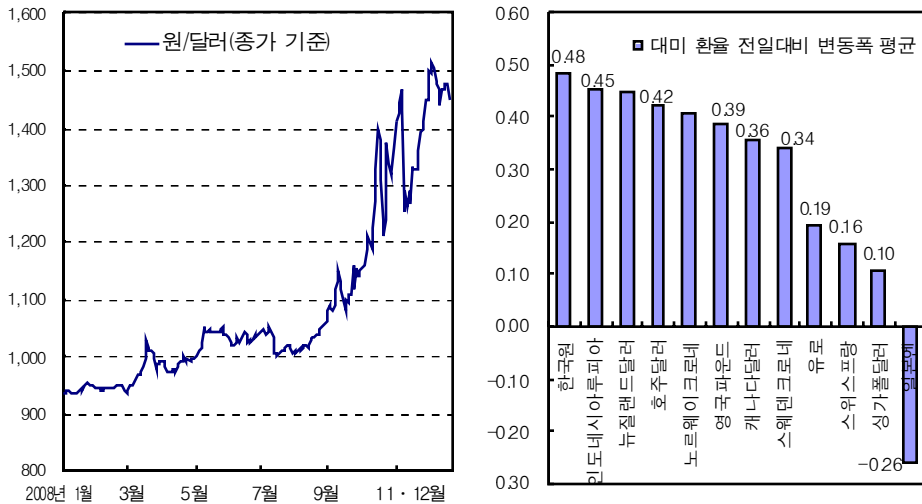
○ 경상수지 : 59.5억 달러(2007년) → -90.1억 달러(2008년 1~10월)

○ 자본수지 : 62.3억 달러(2007년) → -350.3억 달러(2008년 1~10월)

-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도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높음.

○ 2008. 10. 1~12. 8 기간 중 전일대비 변동폭 평균(%)은 원/달러 환율이 0.48%로 싱가포르달러에 비해 약 5배

<그림 5> 원/달러 환율 및 주요국 환율 변동폭



주: 일일 증가 기준, 2008. 10. 1~12. 8 기간 중 전일대비 변동폭 평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시장금리는 신용경색 등을 반영하여 상승세

- 한은이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225bp 인하하면서 안전자산인 국고채금리는 하락

○ 한은 기준금리: 2008. 10. 1(5.25%) → 10. 9(5.00%) → 10. 27(4.25%) → 11. 7(4.00%) → 12. 9(3.00%)

- 국고채금리(3년물): 2008. 10. 1(5.75%) → 12. 9(4.16%)
- CD, CP, 회사채수익률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크레디트물 경색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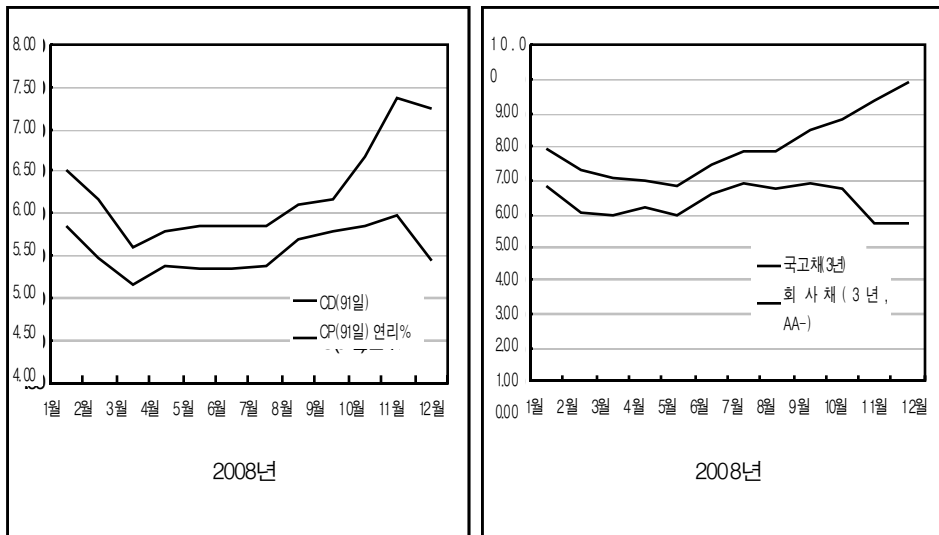
<표 3> 주요 장단기 시장금리 동향

(단위: 연리%, 월평균)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3
CD유통수익률(91일)	4.76	5.73	5.52	5.77	5.79	6.03	5.62	4.75
CP유통수익률(91일)	4.90	6.25	5.95	6.15	6.38	7.07	7.35	7.08
국고채(3년)	4.82	5.89	5.96	5.77	5.81	5.09	4.97	3.95
회사채(3년, AA-)	5.18	6.73	6.99	7.11	7.46	4.99	8.56	8.4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6>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생산·소비·투자: 급격한 하강국면에 진입

- ~정장률: 2008년 3/4분기 실질 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은 0.5%로 2/4분기 0.8%에 비해 낮아졌으며 2004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 ~소비: 고용불안, 자산가격 하락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재판매 2개월 연속 감소세
- ~투자: 3/4분기(5.6%)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던 설비투자추계 10월 중 큰 폭으로 하락 반전(-7.7%)
- ~생산: 수출증가세 둔화되면서 광공업생산 증가율 10월 중 하락세로 반전(-2.4%)

<표 4> 최근 실물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	5.0	0.8	0.8	0.5	-	-	-	-
소비재판매	5.3	3.9	2.5	1.0	3.9	1.4	-1.8	-3.7
설비투자추계	8.6	-0.9	0.1	6.2	9.9	1.5	7.1	-7.7
광공업생산	6.8	10.6	8.6	5.6	8.7	1.9	6.2	-2.4

주: GDP 증가율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자료: 통계청.

□ 고용: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자 증가 급감

- 취업자 증감(만 명): 28(2007) → 21(2008. 1/4) → 17(2/4) → 14(3/4) → 9.7 (10월) → 7.8(11월)

□ 수출: 주요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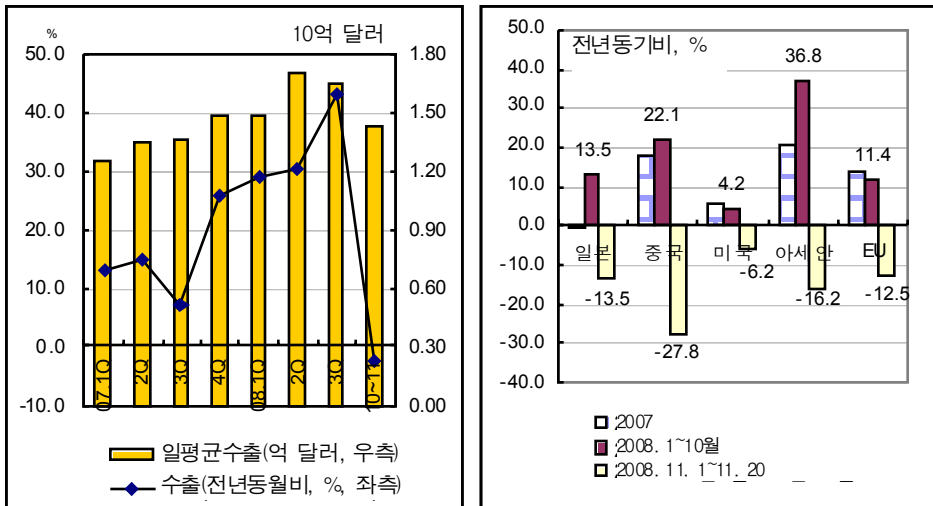
- ~수출증가율은 2008년 3/4분기 27.1% 증가에서 10~11월 중에는 5.1% 감소
  - 일평균 수출금액, 2008년 3/4분기 16억 달러에서 10~11월 14.3억 달러로 감소

-특히 2008년 11월 중 중국, ASEAN, 일본,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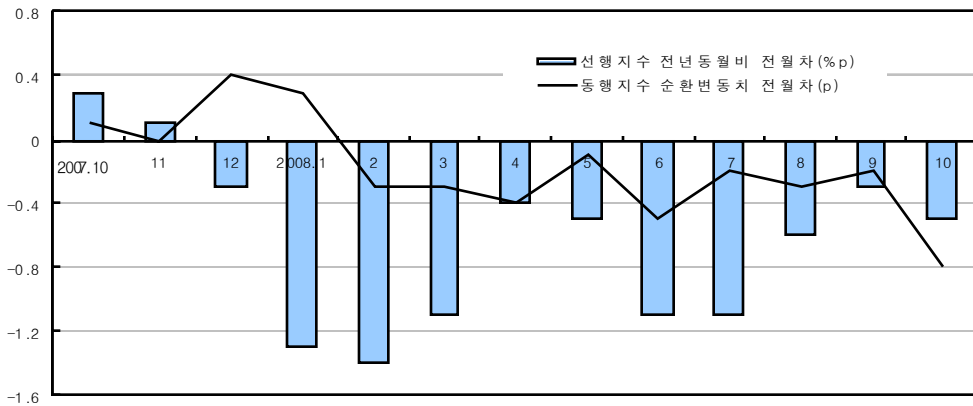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들 하락세 지속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는 2008년 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

<그림 7> 수출 동향



<그림 8> 경기종합지수 추이



###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및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 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 □ 주요국 중앙은행 전격 금리인하 공조

- 미 FRB: 2.00% → 1.50%(2008/10/8) → 1.00%(11/6) → 0~0.25% (12/16)
- 유럽 ECB: 4.25% → 3.75%(2008/10/8) → 3.25%(11/6) → 2.5%(12/4)
- 영 영란은행: 5.00% → 4.5%(2008/10/8) → 3.0%(11/6) → 2.0%(12/4)
- 중 인민은행: 7.20% → 6.96%(2008/10/3) → 6.66%(10/29) → 5.58%(11/26)
- 일 일본은행: 0.5% → 0.30%(2008/10/31, 84개월 내 처음) → 동결(11/24)

##### □ 통화스와프 확대 및 신규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 FRB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 2008년 9월 29일 현재, 9개국 6,200억 달러(ECB, 일본, 영국, 스위스의 5,000억 달러 포함) → 2008년 10월 29일 14개국 2,700억 달러(+무제한 4개국)로 확대

<표 5> FRB와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 분	통화스와프 규모(체결금액기준)
2008. 9. 29 현재 (9개국, 6,200억 달러)	ECB(2,400억 달러), 일본(1,200억 달러), 영국(800억 달러), 스위스(600억 달러), 캐나다(300억 달러), 호주(300억 달러), 스웨덴(300억 달러), 노르웨이(150억 달러), 덴마크(150억 달러)
2008. 10. 13	ECB, 스위스, 영국 무제한 확대
2008. 10. 14	일본 무제한 확대
2008. 10. 28	뉴질랜드(150억 달러)
2008. 10. 29	한국(300억 달러), 멕시코(300억 달러), 브라질(300억 달러), 싱가포르(300억 달러)

-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2008/12/12)
  - 기존 통화스와프 규모: 한·일 130억 달러, 한·중 40억 달러, 한·아세안 65억 달러 등 총 235억 달러

□ G20 회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을 강화

-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칙
  -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확대
  - 자유시장원리 추구 및 보호주의 지양
  - 향후 1년간 새로운 무역 및 투자장벽 설치금지 등

□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 은행 간 채무보증, 예금지급보장, 은행 자본확충 등

<표 6>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적 대응의 유형별 현황(2008.10.1~10.16)

구분	조치 내용
은행 간 채무보증	영국(2,500억 파운드), 독일(4,000억 유로), 프랑스(3,200억 유로), 스페인(1,000억 유로), 네덜란드(2,000억 유로), 포르투갈(200억 유로), 유로존 15개국(은행 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합의), 호주: 금융기관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예금지급보장	미국(한도 10만 달러 → 25만 달러), 영국(한도 3만5,000 파운드 → 5만 파운드), 독일·아이슬란드·헝가리(무제한 예금지급보장), 아일랜드(국내은행 2년간 예금보장), 포르투갈·덴마크·그리스(예금지급보장), 호주(향후 3년간 예금지급보장), 뉴질랜드(향후 2년간 예금지급보장), 홍콩(홍콩 달러 예금 및 외화예금 보장), 싱가포르(싱가포르 달러와 외화예금 보장), EU 27개국(지급보증한도 2만 유로 → 5만 유로로 상향)
은행 국유화(자본확충)	미국(구제금융안 7,000억 달러), 영국(HBOS, RBS 등에 474억 유로 지원), 독일(은행 자본확충에 800억 유로), 프랑스(은행 자본확충에 400억 유로) 등

자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보도자료, 2008. 10. 19.



## 2.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 □ 미국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책 시행
  - FRB, AIG에 대한 구제금융: 1,500억 달러로 확대(2008/11/10)
  - 패니매, 프레디맥의 우선주 매입: 2,000억 달러(2008/9/12)
  - 씨티그룹에 대해 3,060억 달러 지급보증 및 200억 달러 우선주 매입(2008/11/25)
  - FRB, 6,000억 달러의 모기지 부실채권 매입조치(2008/11/25)
- FRB,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실시 중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 달러 대출(PDCF), 기간부 국채임대대출(TSLF), 머니마켓 투자펀드기구(MMIF)의 대출 프로그램 시한을 종전 2009년 1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
- 경기부양책
  - 소득세 환급 등 총 1,680억 달러 규모의 세제지원 실시(2008년 2월)
  -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안 규모, 기존 5,000억 달러에서 7,000억~1조 달러로 증액될 전망
  - FRB, 소비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에 2,000억 달러 투입(2008/11/25)
  - TARP자금(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자금) 활용을 모색하는 등 자동차 3사 지원을 위한 대안을 적극 검토

### □ 일본

- 금융안정대책 발표(2008/10/27)
  - 금융회사에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 한도를 확대(2조 엔 → 10조 엔)
  - 은행의 주식취득제한 완화 등
-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차례 종합대책(2008년 8월, 10월)에 이어 12월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발표
  - 1차 대책(2008/8/29): 소득세 및 주민세 감세(1년간 한시적), 신에너지 기술의 도입 및 개발촉진, 성장잠재력 확충 등(약 11.8조 엔 규모)

- 2차 대책(2008/10/31): 서민생활안정(3조 엔: 재정지출은 3조 엔), 중소기업 지원(21.9조 엔: 재정지출은 0.6조 엔), 지역 활성화(2조 엔: 재정지출은 1.6조 엔) 등 총 26.9조 엔(재정지출은 5.2조 엔) 규모로 추진
- 3차 대책(2008/12/12): 급격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총 23조 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

#### □ 유럽

-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2년간 재정지출과 감세 등에 의한 총액 2,000억 유로(약 25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2008/11/26)
  - EU 27개 회원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1,700억 유로는 각 회원국, 300억 유로는 EU기금 및 유럽투자은행이 투입할 예정
  - 역내의 구매력 진작 등 소비확대에 초점을 둔 이 부양책은 재정적자 기준(GDP의 3% 이내)의 적용 유예, 실업급여 확대, 부가가치세 인하,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
  - 2,000억 유로의 부양책 시행은 정상회의(2008/12/15)에서 합의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
- 영국: 영국정부는 예산안 초안 발표(PBR)를 통해 향후 2년간 256억 파운드(388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2008/11/24)
  - 2008년 12월 1일부터 17.5%인 부가가치세를 15%로 2.5%p 인하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환불금을 120파운드에서 145파운드로 인상
  - 2010·2011년에 예정된 공공투자예산 30억 파운드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개선, 공영주택 건설, 학교시설 보수 등에 긴급 투입
-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190억 유로(329억 달러) 규모의 자국 자동차산업 구제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책 발표(2008/12/4)
- 이탈리아: 저소득층 현금 지원 및 대규모 공공사업투자 등이 포함된 총 800억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2008/11/28)
  - 호주: 총 47억 호주달러(31억 US달러)를 도로, 철도, 교육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부양안 발표

□ 중국

- 증시부양대책(2008/9/19)

- 중국 국부펀드,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의 주식 매입
- 주식 매입거래세 0.1%에서 0.0%로 하향(매도거래세는 유지)
- 상장회사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주식 신용거래 허용
- 국영투자기관인 중앙회금투자유한공사의 은행주 매집

- 경기부양정책

- 총 4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2010년까지 철도·도로·항만 등 SOC 투자 45%, 지진피해 복구 25%, 농촌 기초설비 9%, 환경보호 9%, 서민주택 건설 7%, 기술개발 4%, 의료문화 1% 등에 투자(2008/11/9)
- 경기부양책 후속 방안으로 2,059억 위안의 사회 인프라 투자, 3,770개 수출물품증치세 환급률 제고, 지진피해 복구기금 배정방안 확정, 임업·생태회복 정책 강화 등(2008/11/13)

- 부동산활성화 대책(2008/10/22), 2008년 11월부터 시행

- 주택구입 선수금 기존 30%에서 20%로 인하
- 개인이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 인지세(0.5%), 토지증치세(1%) 면제
- 90㎡ 이내의 소형주택 매입 시, 부동산취득세를 기존 1.5%에서 1%로 인하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

## IV.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sup>1)</sup>

-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은 주요국의 대응조치와 거의 비슷한 대책을 실행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주요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 확대, 은행지원, 금융시장 안정방안 및 실물경기 부양대책 등 다양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정책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한 후 보완 및 추가 대책을 찾아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1.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원활화

- 금융·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대책은 다소 느장 대응한 아쉬움은 있으나 글로벌 금융공조 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sup>2)</sup>
  - 한은의 2008년 9월 15일 이후 12월 말까지 RP 매입 등에 의한 총 19.5조 원 규모 지원과 네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금리인하(총 2.25%p) 및 정부의 10조 원 규모 채권안정펀드 조성계획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 정부와 한은은 2008년 10월 이후 총 55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12월 말 377억 달러를 공급(68% 집행)
  -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

1) 안순권(2009),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정책 제언』, 제10장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인용.

2)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주가가 급락하였으나 2008년 12월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준금리의 대폭적 인하(12월 11일, 1%p), 채권안정펀드 조성 등으로 지표금리뿐 아니라 은행채, 회사채 등 시장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10월 30일)에 이어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12월 12일) 등에 힘입어 12월 들어 하향안정세를 보였다.

- 와프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로 확대, 외화유동성 불안은 크게 해소됨.
-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기업과 가계로 돈이 가지 않는 신용경색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로 외화유동성 불안은 크게 해소되었으나 협정의 만기가 있는 만큼 외화유동성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 은행에서 실물경제로 돈이 잘 흐르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데다 연말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위험대출 기피현상 때문임.
  - 2008년 11월 중 기업대출은 3.5조 원 증가하여 전월의 7.3조 원보다 격감한 반면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넘겨 한은에 예치한 초과지급준비금은 11월 중 10조 원으로 증가, 9월 이전의 2조 원에서 급증함.
  - 금융당국은 2008년 12월, 은행의 기본자본비율 9%와 자기자본비율 12%를 달성하라고 권고하였으나 2009년 1월 들어 부실처리를 위한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전제로 우량은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BIS 비율 10%라고 유연한 자세로 전환<sup>3)</sup>

<표 7> 국내은행의 BIS 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추이

구 분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6월 말	2008년 9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	12.08	12.95	12.75	12.31	11.36	10.86
기본자본비율(%)	7.96	9.27	9.15	8.97	8.54	8.33

주: 2008년은 바젤II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3) 은행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이며, 기본자본은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실질적인 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나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분을 말한다. 보완자본을 뺀 기본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가 바로 기본자본비율이다. 통상 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8%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 회복 기미의 불씨를 살려 안정 기조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신용경색을 해소하여 금융권에서 실물경제로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유동성 직접공급 확대, 중소기업 대출확대, 은행자본 확충 및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등이 실행되어야 함.

-한은의 2008년 12월 중 1%p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침체를 억제하는 수비자세에서 신용경색 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자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 금리인하도 적극 단행할 필요가 있음.

○ 미 FRB가 2008년 12월 16일 기준금리를 1%에서 0~0.25%의 사실상 제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가 커짐.

-돈맥경화(錢脈硬化) 해소에 기존의 유동성 직접방식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부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적극 실행해야 함.

○ 국고채, CD, 은행채 중심의 기존의 RP 매입 규모 및 범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발상이 필요함.

○ 한은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할 경우의 부작용<sup>4)</sup>을 최소화하려면 채권안정펀드에 대한 간접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펀드자금의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 및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흑자 및 회생가능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자금난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은 은행의 BIS 비율을 높여 대출여력 추가확대

○ 기보와 신보가 90% 정도의 부분 보증을 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

○ 위기극복 후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

4) 한은이 정부가 조성하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에 5조 원 규모를 간접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미 FRB처럼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정책의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신용창출기능 제고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sup>5)</sup>에 의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도 차질이 없게 해야 함.

-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부실의 급증으로 인한 은행의 급속한 건전성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커짐.
-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은행의 BIS 비율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8% 이하로 하락하기 이전에 국민의 혈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을 둘러싼 논란과 국회동의의 절차를 피하면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됨.
- 올해 1월에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 은행에 모두 지원될 경우 2008년 3분기 말 10.86%였던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6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의 BIS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
- 지원대상 은행에 대해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배당축소 등을 요구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자본확충펀드로 BIS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은행들의 실물부문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기능 회복이 중요

<표 8>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실적 및 추진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실적(2008. 11. 1~12 26)			계획(2008. 12. 29~12 31)			합계 (2008. 11~ 12월 중)
	일반은행	특수은행	계	일반은행	특수은행	계	
증 자	35,000	17,600	52,600	6,240	-	6,240	58,840
신종자본증권	3,300	-	3,300	2,700	-	2,700	6,000
후순위채	62,729	15,500	78,229	11,360	1,000	12,360	90,589
기 타*	9,259	-	9,259	1,320	-	1,320	10,579
합 계	110,288	33,100	143,388	21,620	1,000	22,620	166,008

주: \* 국민은행의 KB 금융지주 주식 등 보유분 매각.

자료: 금융감독원.

5)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에는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2조 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 외환시장은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글로벌 신용경색의 완화 가능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정착 가능성 등에 힘입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로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고 볼 수 있음.

○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가 각각 300억 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잔액 230억 달러, IMF 단기 유동성 지원창구 220억 달러를 포함하면 외화비상자금은 1,050억 달러에 달함.<sup>6)</sup>

- 한은과 정부가 공급한 외화 유동성이 외화 차입금 상환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외화 자금난은 지속되고 있음.

○ 은행의 해외차입금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조달한 외화로 상환할 수밖에 없음.

○ 한은은 외화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의 수출입금융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달러 유동성의 일부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불황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금융지원은 매우 중요함.

- 근본적으로 해외자금 조달여건이 개선되어야 외화자금 사정이 좋아질 수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중요함.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수지 관리강화 및 외환보유액 확대가 필요함.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경기의 급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회복이 시급함.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중국, 동남아, 중동 등 경기침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강화

---

6)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중 일부는 위기 때만 인출할 수 있고, 국민 정서상 IMF 자금을 빌려 쓰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동원가능한 자금은 690억 달러에 달함.



- 환율상승효과를 살려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
- 기업의 해외투자 최소화 및 국내 조달비율 확대
- 국내 일자리 감소 및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억제에 도움
- 외환보유고 확대를 추진하여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정 회복 및 통화스와프 협정 국가인 미국·중국·일본에 대한 경제외교적 입지 약화를 방지
- 외환보유액 세계 1위인 중국(1조7,682억 달러), 2위 일본(9,755억 달러)와의 통화스와프 확대를 한·중·일 금융공조 강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 확대가 필요함.
- \* 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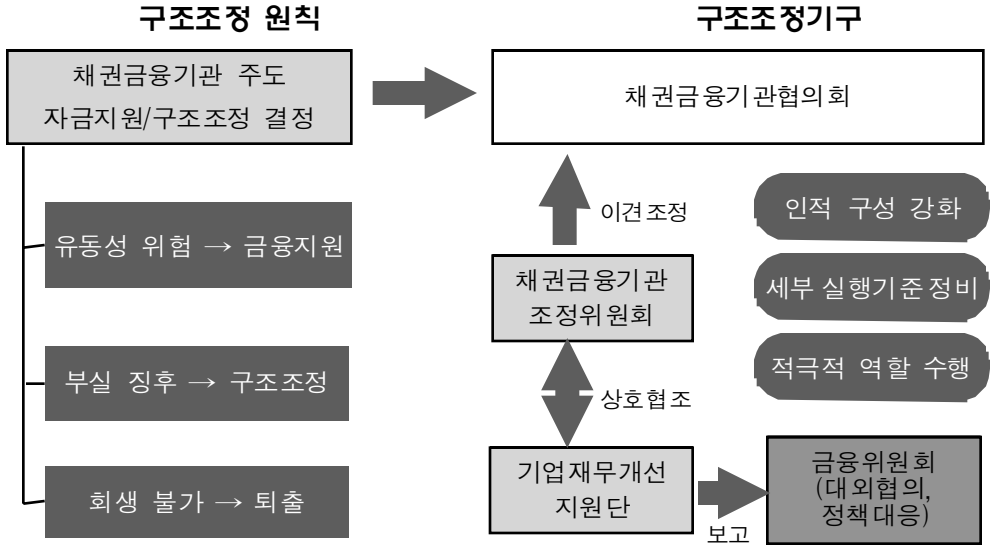
-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
- 위기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기능 정비,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재정부, 한은, 금감원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의 불협화음을 줄이는 제도개선 노력 필요
- 위기극복 후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
-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간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의 불협화음을 줄이는 제도개선 노력 필요
- 부처 간 정보소통 부족, 권한 및 영역 다툼 및 책임전가 등을 최소화할 제도적 개선

## 2.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실행

- 부실이 심각한 제2금융권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나 지구노력을 요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자산관리공사 4,000억 원(2009년 예산 추가) 자본금 증자
  - 제2금융권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부실화된 캐피탈사와 카드사를 정리하고 저축은행 간 M&A를 유도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가격 산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반영
- 신용경색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가려 주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함.
- 정부는 대주단(채권단) 협약,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유도하며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던 미온적인 입장에서 2008년 말부터 적극적 구조조정 유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9년에 글로벌 경기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어 대부분의 업종이 타격을 입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기업 부실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1월 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로 기업구조조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됨.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신규 자금지원과 만기연장, 부실자산 매각, 기업퇴출 등 채권금융회사 간 이견조정,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채권매입 및 상황가격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됨.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협조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됨.

<그림 9> 기업구조조정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2009년 업무보고.

-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산업정책 차원의 업종별 공급과잉 해소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계적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반도체·철강·화학·조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수출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체 경영합리화를 유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회복기에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
  - 건설업의 경우 부실회사의 정리와 함께 부동산 거품기의 주택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부동산규제 및 세제 완화와 부동산 금융규제완화 등에 의한 주택수요 회복을 유도, 주택시장의 수급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큰 틀의 구조조정으로 우량 및 회생가능 기업이 가려질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회사채 및 CP 시장의 신용경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소수의 개별기업을 정리하는 피상적인 구조조정에 그치면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경색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구조조정에 앞서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및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003년 카드대란 발생 이후 부실화된 LG카드의 처리와 관련한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원칙과 처리비용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실기 등을 교훈 삼아 부실금융회사 및 기업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2007년 11월에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및 신규지원 방안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조정은 자사의 채권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관례적인 원칙이나 세부 실행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의 신규자금 지원분담을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권의 대립이 실례임.

-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도 시급

- 채권은행들이 건설 및 조선 회사 등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을 신속히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별로 서로 다른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함.

### 3. 적극적 실물경제 회복대책

□ 가능한 모든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여 경기침체 국면을 최소화해야 함.

-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대책의 우선 순위는 수출보다는 내수활성화에 두어야 함.

- 내수부문은 통제할 수 있는 내생변수이고 수출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책대응 여하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정부의 실물경제종합대책은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를 축으로 건설 부동산 경기 및 지방경제 살리기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판단됨.

- 감세와 재정지출확대의 어느 쪽이 경기부양효과가 더 있는냐의 논쟁은 현 상황에서 무의미함.
  - \*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대책은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임.
  - \*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는 동시에 추진할 때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임.
-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연착륙은 가계부실 확대에 의한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 및 장기복합불황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수도권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실물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9>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

구 분	주요 내용
실물경제활성화 (2008/10/30) (2008/11/3)	수도권 규제완화, SOC(4.6조 원), 중소기업·영세사업자·농어업 지원(3.4조 원)등 공공지출확대 11조 원, 세제지원 확대 3조 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 연장, 2009년 재정조기집행(상반기 중 연간 주요 사업비의 60% 집행)
지방 살리기 대책 (2008/12/15)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정비에 14조 원, 지방 이전기업 법인세 면제 5년 → 7년, 지방 소득·소비세 신설 검토(2010년), 2009년 농촌 기숙형 고교 60개 추가, 제주 중문단지내 내국인 면세점, 응급질환 특성화 센터 72곳 설치, 문화·체육·관광 시설 확충에 3조 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 (2008/6/11, 2008/8/21, 2008/9/1, 2008/9/19, 2008/9/23, 2008/10/21, 2008/11/3)	재건축 규제완화(소형평형의무비율 탄력적용, 용적률 상향 조정,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감면(지방 미분양 관련 세제 및 금융조건 완화),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대상을 8·21대책 이전으로 소급적용, 현행 10~5년 → 7~3년으로 단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수도권 포함 투기지역 조정, 주택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매입

(계속)

구 분	주요 내용
2008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2%p 인하, 인당 공제확대, 법인세율 인하(13%→10%, 25%→20%), 낮은 법인세 과표 상향(1억→2억 원), 고가주택 기준상향(6억→9억 원), 장기보유 공제확대(10년 이상 80%까지), 1가구 1주택 감면 거주요건은 3년으로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 동결, 종합부동산세 상한 축소 300%→150%,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10~50%→6~33%), 중소기업 상속공제 확대(1가구 1주택 상속공제 신설)

자료: 관계부처 합동,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009년 경제운용방향; 주요 언론 보도.

□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2008. 11. 3)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12. 16)은 올바른 방향설정임.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은 △재정기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실물경제활성화 강화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 공공지출 확대 11조 원(SOC 투자확대 4.6조 원,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 원, 공기업 투자확대 1조 원 등)
- 세제지원 3조 원(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35.6조 원으로 GDP 대비 4.0%로 주요국 평균 이상 수준임.7)

- 2008~2009년 기간에 2008년 추경예산 4.6조 원과 11·3 대책에 따른 지출확대 11조 원 등 재정지출확대 규모가 15.6조 원이며 여기에다 고유가 대책에 따른 2008년 세제지원 4.4조 원, 세제개편에 따른 2009년 감세와 고유가대책 중 2009년 감세 총 10.3조 원, 11·3 대책 세제지원 3조 원을 합친 기존 대책은 총 33.3조 원(GDP 3.7%)이 됨.
- 국회재정위 감세추가분 2.3조 원을 더하면 총 35.6조 원(GDP 4.0%)이 됨.
- 2010년 감세분 20조 원과 2011년 감세분 23조 원까지 합치면 총 재정대책 규모는 79조 원(GDP 8.8%)으로 늘어나게 됨.

7) GDP 대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규모는 미국이 3.5~7%, EU가 1.5%, 일본이 2%, 중국이 10% 등이다.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2008. 12. 15)은 지방의 재정확충, 기업환경개선, 거주여건 향상 등을 축으로 지역경제 회생과 불황 탈출을 동시에 겨냥함.

- 지방 살리기에 5년간 1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됨.

- 2008년 9월 발표한 5+2광역경제권 전략에다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권 구상 등을 보완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 42조 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 원, 지방기업 세제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13조 원 등

-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19만 명 가량의 고용창출과 23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확충과 기업환경개선으로 지방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기본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 2010년까지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 지방정부의 재정독립성 강화
- 지방 이전기업은 7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 지방 개발을 위한 대형국책사업 마련
-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교육·문화 혜택 확대

<표 10>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지방재정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 발전에 활용(2010년)</li> <li>- 2010년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추진</li> <li>- 지방경제활성화에 따른 법인세·부가세 증가분 중 일부를 지방에 환원(2010년)</li> </ul>
기업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이전기업 지원 확대(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7년간 100%, 3년간 50%로</li> <li>○ 이전보조금 확대: 토지매입비 등 50% → 70%</li> </ul> </li> <li>- 지방 기업의 신규고용 보조금 인상: 1인당 50만 원 → 70만 원 (2009년)</li> </ul>
지역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공사 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발주 50억 원 → 70억 원 이하, 공공기관 50억 원 → 150억 원 이하</li> <li>○ 지자체 70억 원 → 150억 원 이하(2009년)</li> </ul> </li> <li>-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li> <li>- 제주도에 내국인용 면세점 추가 설치(2009년 상반기)</li> </ul>

(계속)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시설 확충: 20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상황 발생 30분 이내 응급처치 가능토록 함.</li> <li>- 2017년까지 53개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li> <li>- 모든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 생활체육시설 설치(2012년)</li> </ul>
---------	--

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 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신속한 시행이 요구됨.

- 제제개편으로 고용증가는 연평균 총 9만9,000명에 달하고 투자는 1.18%(법인세 0.34%, 소득세 0.33%,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0.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용 증가효과는 법인세 3만 명, 소득세 5만9,000명,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1만 명
- 투자 증가효과는 법인세 0.34%, 소득세 0.33%,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0.51%로 추정

□ 지금까지 나온 각종 경기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예산안의 조기집행으로 2009년 초 경기침체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노력이 필요함.

- 2009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 확대액 10조 원 중 절반가량인 4.6조 원을 SOC 확충에 투입하여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건설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하려는 포석은 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보임.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지방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함.

-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장밋빛 환상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표 11> 2009년 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억 원)

구 분		2008년	2009년 확정	비 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신용보증기관 출연	2,880	11,600	신보(9,000) 등
	수출보험기금 등 출연	345	3,327	수보(3,100) 등
	국책은행 출자	-	17,000	산은(9,000), 기은(5,000), 수은(3,000)
	자산관리공사 출자 등	-	6,000	자산관리공사(4,000), 주택금융공사(2,000)
SOC 투자	도로	77,848	94,942	고속도로 건설(9,293 → 14,544)
	철도	36,540	47,454	철도 건설(23,811 → 37,145)
	도시철도	12,863	15,898	도시철도 건설(6,623 → 8,729)
	수자원	16,007	23,164	하천관리, 홍수예보(11,867 → 18,485)
일자리창출	잡 트레이닝 강화	1,106	4,643	중소기업 청년 인턴(0 → 1,549)
	직업능력개발지원	14,260	16,087	청년 등 실업자 훈련(2,205 → 3,924)
	사회적 일자리	10,458	12,322	숲 가꾸기(2,478 → 3,032)
	청년 등 단기 일자리	-	881	일자리 5,100개 창출
맞춤형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68,577	71,306	생계급여(22,564 → 24,460)
	장애인지원	7,034	7,304	장애인 사회활동 도우미(738 → 1,111)
	영유아보육지원	14,178	17,104	차등 보육료(10,376 → 12,821)
	노인지원	20,523	31,103	기초노령연금(1,5948 → 24,697), 노인 일자리 창출(833 → 1,155)

자료: 기획재정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습양상에 따라 내년 경기가 달라질 것임.

○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경기순환을 벗어난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함.

- 이 경우 추가적인 감세 및 재정확대,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적인 내수침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민간 분양가상한제, 잔존 재건축 규제 등은 경기하강 및 부동산가격의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완화 및 철폐
-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재정지출 추가확대의 여력이 있음.
- 2000년 이후 8년 연속 통합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므로 내년 이후 3년 정도는 적자 운용의 여유가 있음.

□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노력도 필요

-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더라도 상당기간 경기대책용 재정적자가 예상됨.

- 위기극복을 위한 적자재정 편성은 성장률 격감과 그로 인한 고용기반 붕괴 및 세수감소 등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필요할 경우 내년에 추경예산을 편성, GDP 대비 경기대책 비율을 5% 수준으로 높이더라도 중소기업 및 민생지원 등 취약부문 및 계층보호에 집중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출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추가 재정지출확대는 교육, R&D, 재생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고 SOC 투자는 환경·문화·관광·서비스 부문과 연계하여 공공건설 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임.
- 공적자금 관리 및 회수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4.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해야 함.
  - ˆ질물경제 침체의 여파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 개선이 시급함.
    - 노동시장제도의 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적극 실행
  - ˆ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함.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줄여 불필요한 비정규직 해고를 줄이고 정부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제고
    - 이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현 상황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오히려 제고할 수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등을 병행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임금상승 억제, 근로시간 조정 및 다양한 고용형태 허용을 통해 경기침체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ˆ임금상승 억제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분담해야 함.
    - 높은 임금은 신규고용 창출을 저해하고 실업을 장기화시켜 경기침체의 영향을 일부 실업자에게 집중시킴.
    - 따라서 임금상승 억제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자 양산을 막아야 하며 고용안정이 절실하다면 임금 동결이나 삭감도 고려해야 함.
    -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고용조정보다는 가급적 근로시간 및 임금 조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 협력에 동참해야 함.
  - ˆ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하여 고용사정 악화의 폐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함.

-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도입하여 여성·청년·고령층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이는 취약계층의 가계소득 유지를 도와 고용사정 악화의 폐해가 일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킴.
  - 파견 허용 업종 대폭 완화
  -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보호와 취업알선을 위한 최저임금 하향조정
  - ~비정규직 관련 법규의 개정뿐 아니라 임금제도의 개편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하여 유연성을 확대
    - 직무급 제도의 도입
    - 평생교육 강화
  -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
- 적절한 시간제근무(파트타임제) 확대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고용창출 기반을 확대
-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통해 시간제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을 제고
    -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단시간근로의 사용 또한 용이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이는 정규직의 과보호를 낮추는 압력으로도 작용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을 높임.
    - 동시에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고용창출에 도움을 줌.
  -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조합으로 노동시장의 성과를 제고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여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
    - 임금 유연성의 확보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 세제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금연금제를 적극 선택하도록 유도하며, 기업은 경감된 인건비 부담을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연결

-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력 수급 불일치를 완화해야 함.

## 5.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규제개혁은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함.

- 정부의 1차 및 2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이어 핵심규제에 대한 성역 없는 개선을 표방한 것은 경제회생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할만 함.

-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환경성 평가 간소화 등 조속 실행

- 투자확대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하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시행

-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에 많이 기여하는 부문의 수도권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제
- 일본이 10년 불황을 극복한 데는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1,000건에 달하는 기업규제를 폐지한 것이 주효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 제조업 및 건설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 관련 규제완화, 특히 수도권 규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가 시장접근성 내지 고급인력 확보를 전제로 하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규제의 완화로 국내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효과를 높여 줄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임.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과 조기집행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구

- 악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나라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는 2003년도에 23위, 2007년도에는 30

- 위로 순위가 떨어져 경제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7개 부문의 규제개혁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야 함.
    - 창업부문에서는 절차 수와 최소자본금 비율을 낮추어 창업 소요시간과 창업 소요비용을 감축해야 함.
    - 허가취득에서는 허가취득 소요비용을 줄임.
    - 노동규제의 경우 고용 경직성의 완화와 해고비용을 축소
    - 재산등록부문에서는 등록 관련 소요비용을 감축
    - 납세부문에서는 납세 소요시간 및 기타세금을 줄임.
    - 무역부문에서는 수입절차서류의 수를 줄임.
    - 계약이행부문에서는 관련 절차 수를 감축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임금인상 억제 및 SOC 투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쟁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제조업부문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제조기업들의 대중국 해외투자 및 이전을 줄이고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시켜야 함.
  - 국내 산업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SOC 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며, 생산성이 낙후된 영세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함.
    -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짓는 국내 산업기반의 고도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방경제활성화와 토목건설투자의 확대를 유도함.
  -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녹색산업 등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창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현재 지식서비스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타 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6.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 정부는 올해 보증기관 보증, 은행자본 확충, 면책제도, 국책은행 자금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 중임.<sup>8)</sup>

-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중기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

○ 보증기관 신규 보증공급 규모를 2008년 13.5조 원에서 2009년 25.2조 원으로 확대

○ 2009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2조 원 발행분도 상반기 중 조기집행 추진

- 20조 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을 지원

- 고의, 중과실이 없는 대출에 대한 은행 임직원 면책조치를 2009년 1월 중 시행

- 잔은, 기은 등 국책은행을 통한 중기 자금공급을 확대

○ 2008년 32조 원(산은 8조, 기은 24조) → 2009년 44조 원(산은 12조, 기은 32조)

-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60% 이상 공급할 계획

□ 신용경색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되나 보완이 필요함.

- 2008년 18개 은행의 원화 중소기업 대출은 2007년 말 대비 52.4조 원 증가했으나 2006년 말 대비 2007년 순증규모인 68.2조 원에 비해 약 23% 감소

○ 상반기 중 35.1조 원 증가했으나 하반기에 17.3조 원 증가에 그쳐 미국 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반영

---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08년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2009년 지원계획」, 2009. 1. 8.

<표 12> 국내은행 중기대출<sup>1)</sup> 증가현황

(단위: 기간 중 증감, 조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출순증	6.2	12.4	45.3	68.2	52.4 <sup>2)</sup> <54.7>	2.6	2.9	3.4	4.1 <sup>3)</sup>	△1.8 <sup>4)</sup> <△0.1>
(월평균)	(0.5)	(1.0)	(3.8)	(5.7)	(4.4)					

주: 1)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기준이며, < > 내는 실질증가액 기준.

2) 특별예대상계, 채권상각·매각 등 실적 반영 시 54.7조 원.

3) 특별예대상계(0.2조 원), 채권상각·매각(0.3조 원) 등 반영 시 4.7조 원.

4) 특별예대상계(0.7조 원), 채권상각·매각(0.9조 원) 등 반영 시 0.1조 원(잠정치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경쟁력을 갖춰 회생가능한 기업에 자금이 집중 공급되도록 옥석 가리기를 위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실행해야 함.
  -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금융 부실이 심화될 경우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음.
  -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유동성 애로기업을 지원하면서 신속한 워크아웃도 추진

<표 13> 패스트트랙 유동성 지원 실적(2008.10.13~12. 31)

(단위: 개사, 억원)

구분	지원업체 수			지원금액				
	지원신청	평가완료	지원완료	대출전환	신규여신	만기연장	기타	합계
KIKO 기업	642	605	413	7,055	959	6,244	12	14,270
일반기업	4,531	3,125	1,259	-	4,819	9,049	51	13,919
합계	5,173	3,730	1,672	7,055	5,778	15,293	63	28,189

주: 은행별 지원실적을 단순합산한 기업 수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신용보증제도의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묻지마식’ 퍼주기 대출에 따른 부



실급증의 소지를 차단해야 함.

- 기보와 신보가 수출업종을 제외한 대출의 경우 90% 정도의 부분 보증을 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
- 위기극복 후 신보와 기보의 통합 추진으로 중소기업 보증지원제도를 효율화

□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 경제난국 극복대책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사회안전망 대책을 대폭 강화

- 최저생계비 인상, 빈곤층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노숙인 일자리·거주지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시장금리 안정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민생대책 수립

-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등 재정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의 소비확대 없이는 내수경기활성화가 쉽지 않음.
- 기초생활보호자, 차상위계층 외에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함.

## 참고문헌

- 국제금융센터, 『2009년 글로벌 금융환경 점검과 전망: 금융위기의 향방과 파급 영향을 중심으로』, 2008.
- 관계부처합동,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2008. 12. 16.
- \_\_\_\_\_, 『2009년 경제운용방향: 세기적 위기를 선진 일류국가 도약 기회로』,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 2008. 12. 16.
- 금융위원회, 『금융위기 극복방안』, 2009년 업무계획, 2008. 12. 18.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08년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2009년 지원계획』, 2009. 1. 8.
- 기획재정부, 『2009년 경제운용방향 참고자료』,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 2008. 12. 16.
- \_\_\_\_\_, 『2009년 경제전망』,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 2008. 12. 16.
- 기획재정부 외,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008. 11. 13.
- 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경제의 부문별 성장기여율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07.
- 삼성경제연구소, 『국민소득 2만 달러 가는 길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004.
- \_\_\_\_\_,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색의 원인 및 시사점』, 2008a.
- \_\_\_\_\_, 『최근 일자리창출 부진의 원인』, 『SERI경제포커스』 제181호, 2008b.
- \_\_\_\_\_, 『최근 현황 및 2009년 경제전망』, *SERI Economic Outlook*, 2008. 11. 27.
- 아이비엠(IBM), 『IBM 한국보고서』, 2007.
- 안순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정책 제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전략』, 제10장, 한국경제연구원, 2009. 1.
- 외교통상부, 『경제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한 2009년 업무계획』, 2009년 업무보고, 2008. 12. 31.
- 이병기, 『기업환경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 12. 3.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8. 9. 22.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08 하반기』, 2008.
- 한국경제연구원,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2007.
- 한국경제연구원·KII 추진위원회,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요약)』, 2008. 10. 1.
- 현대경제연구원,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한국경제주보』 08-07, 2008a.
- \_\_\_\_\_, 『최근 고용창출 부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경제주보』 08-22, 2008b.
- \_\_\_\_\_, 『금융위기 확산방지 대책: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한국경제주보』 08-45, 2008c.
- \_\_\_\_\_, 『경제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정책제언: 경제위기 시 재정의 역할 제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리포트』 08-01, 2008d.
- HM Treasury, *Long-term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urope*, 2005.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 IMF, *2008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8. 10.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Financial Stress, Downturns, and Recoveries*, October 2008.
- OECD,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OECD Countries*, 2003.
- \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4.
- \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2007.
- World Bank(www.worldbank.org), *Doing Business 2008*, 2008.
- World Economic Forum(WEF),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7*, 2007.